

“김 지사 당 지도부 차원 재검증 필요”

민주 이원택 의원, ‘전북도 12·3 내란의 밤 방조 의혹’ 관련… “추가 증거가 나온 이상 재검증 나서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23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내란 방조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찾아냈다”며 당 지도부의 재검증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주당 공천관리 위원회가 경선 후보를 확정할 이후 김 지사의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추가 증거 두 가지가 새롭게 확인됐다”며 “당이 이를 외면한다면 스스로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만큼 최고위원회와 공관위가 사실 규명을 위해 책임 있게 재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 8일 김 지사의 내란 방조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경선 참여를 허용했으나 “그 결정은 면죄부가 아니라 조건부 판단 유보였고 이후 추가 증거가 나온 이상 재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의 내용은 첫 번째 추가 증거는 전북도 소방본부 내부 문건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문건에는 2024년 12월 4일 자정 도지사 주재 회의 직후 ‘긴급대응태세 확립, 청사 보안 강화’ 등의 지시가 하달된 사실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2.3 내란의 밤 당시 김 지사가 불법계엄 관련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기존 해명은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전북도는 여전히 비상계엄 상황을 전제로 대응을 이어갔고, 이같은 조치들이 도지사 지시사항에 근거했다는 것은 단순한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사실상 계엄 체제에 편승한 행위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23일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 12·3 내란의 밤 방조 의혹과 관련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찾아냈으며 김관영 도지사에게 대한 당 지도부의 재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당시 대응을 총괄한 도민 안전실장의 공개 발언이 도마에 오르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도민안전실장이 ‘군에서 만든 계엄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다’, ‘계엄법에 따라 지원했다’고 명확히 밝힌 것은 도 수뇌부가 계엄 체제를 전제로 움직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도지사와 행정부 지사 주재 회의 직후 나온 점에서 김 지사가 이를 몰랐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으며 전북도 수뇌부가 불법계엄 체제에 순응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몰아

붙였다.

이 의원은 12.3 내란의 밤 당시 김 지사의 대응여부와 태도에 대해서도 두고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는 공관위 결정이 마치 자신의 결백을 입증한 것처럼 왜곡하며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문제 제기를 ‘흑색선전’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이는 진실 규명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정치적 방어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한 압박도 이어지는 가운데 이 의원은 “민주당 강령은 민주주의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내란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순응한 인물을 그대로 후보로 두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한 “현 정부가 내란 청산을 기치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부에서조차 이에 대한 검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김 지사에 대한 재검증에 속속히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행위와 이를 덮기 위한 거짓 해명에 대해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김관영 지사의 내란방조 행위와 거짓 해명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당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진안군수에 도전하는 동창욱·이우규·한수용 예비후보와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공정한 공천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원 100% 경선·엄정히 검증해야”

동창욱 등 민주 진안군수 예비후보 3명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안군수 선거에 도전하는 동창욱·이우규·한수용 세명의 예비후보가 공정한 공천과 함께 후보자의 엄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세 후보는 2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진안군수 후보 공천 방식과 관련해 “당원 100% 경선 실시와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 후보와 지지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세 후보는 “정당의 공천은 당과 지역의 신뢰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현재 진안군 공천 규정은 군정 운영에 대한 신뢰 문재와 후보 검증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한수용 예비후보는 “이럴 때일수록 공천의 정당성은 당원에 가서 나와야 한다”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싼 공정성과 신뢰 논란이 있는 만큼,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공천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당원 100% 경선으로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이우규 예비후보는 진안군 군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감사 및 논란을 거론하며 엄정한 검증을 요구했다.

그는 “전북도 종합감사에서 인사 운영과 관련된 다수의 지적 사항이 제기됐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며 “공금 사용 문제, 산하기관 인사 논란, 공직 갑질 결과 등은 단순한 오류가 아닌 시스템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직 프리킥으로 이러한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되며, 자료와 절차에 근거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동창욱 예비후보는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판단을 촉구하며 “공천은 정당이 시민에게 책임 있게 정치인을 추천하는 과정”이라며 “도덕성과 공직 책임성, 정무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후보는 이날 공동 선언을 통해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 진안군 발전을 위한 정책 연대에 합의했다”며 “공천 결과와 관계없이 진안군 변화라는 목표를 위해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재생에너지 수익 도민에게 환원

‘도지사 출마’ 안호영 의원 에너지 기본소득 구상 제시

전북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수익을 도민에게 직접 환원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구상이 제시됐다.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도전 중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장은 2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 수익을 기반으로 도민에게 연 1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는 ‘전북형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전북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2위, 태양광 설치 1위라는 에너지 생산 거점이지만, 수익은 외부 자본으로 유출되고 도민은 환경 부담만 떠안아 왔다”며 “이제는 생산된 에너지가 도민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전북형 에너지 햇빛마을’ 1,000개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마을 단위로 1MW 규모의 공동체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고 신선했던 전북에너지공사가 사업 보증을 운영을 맡아 도민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발전 수익은 매출 상환 이후 주민들에게 배당해 가구당 연 100만 원 수준의 소득으로 돌아가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북형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함께 송전선로 인근 주민에게 발전 수익을 배분하는 ‘계통연급’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송전망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 보상 체계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전북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전력의 지역 내 직접 거래와 요금 차등제를 가능하게 하고, RE100 산업단지과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일

“골목경제 심폐소생 책임행정 전환할 것”

강성희 전주시장 예비후보

강성희 진보당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지역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공약 1호를 발표하며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1호 공약 발표를 통해 “행정이 뒷받침 되고 상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시대는 끝났다”며 “전주시가 직접 현장에 나서 지역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책임 행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골목상권 행정 지원 강화 △공공 배달업 전환 △금융 지원 확대 등 3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강 후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 매니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과정에서 상인들이 직접 동서확보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전주시가 지정 절차 전반을 전담하는 방식이다.

시는 후보자 발굴부터 상인회 조직, 행정 서류 처리까지 지원하며 상권 육성과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어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협력형 공공 배달업 전환도 추진한다.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강 후보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 보증 규모를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상환 후 재대출이 가능한 ‘회전형 금융 구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증료를 연 1% 수준으로 낮춰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땀 흘리는 정읍발전, 경험과 실행으로 완성”

이학수 정읍시장, 재선 도전

이학수 정읍시장이 23일 오전 11시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9기 정읍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학수 시장은 “민생을 지키는 책임으로, 미래를 바꾸는 실행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단없는 정읍 발전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지역 내에서 제기된 무소속 출마설이나 불출마 가능성 등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비후보 등록을 늦추는 이유에 대해 “개인의 정치 일정이야 흥분보다, 지금 맡고 있는 시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날 출마선언을 통해 △태인 신규 일반소매단지 조성 등 일자리 구조 혁신을 통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정읍시민 햇빛 연금제 도입 및 복지 확대를 통한 시민 삶의 안정 강화 △청년인 신혼 주택 공급 등 아이와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친화 환경 구축 등 향후 시장 방향도 제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양충모 남원시장 예비후보, 지역 소멸위기 돌파 2차 공약 발표

양충모 남원시장 예비후보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원의 인구소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교육, 산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2차 공약을 발표했다.

양 예비후보는 전북에 남원 글로벌 캠퍼스에 내국인 정원을 총 800명 증원, KAIST AI공공의료 캠퍼스를 유치하는 등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을 발표했다.

또한 교육은 복지가 아니라 도시의 생존전략이 될 수 있다며, 남원을 ‘떠나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교육도시로 전환하고, 공공의대 설립계획과 연계해 KAIST AI 공공의료 캠퍼스를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제시, 해당 캠퍼스는 의료 AI, 데이터,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집적되는 연구 창업 복합 클러스터



로 조성을 발표했다. 특히,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벨트 구축과 남원형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기반 인구 유입 전략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